

독일의 통일과 북한의 변화 그리고 민족통일

고 성 준*

— 목 차 —

1. 서 론
2. 독일 통일의 배경과 통일독일의 과제
3. 북한의 최근 동향
4.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I. 서 론

지난 1년동안 일어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분단의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면 통일독일의 탄생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다. 독일의 분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대국 점령 아래서 이들 점령군의 후견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 두 개의 정부가 서게 되면서 비롯됐다.

그리고 분단이 계속되면서 반공민주정부와 공산정부라는 두 개의 상극적 체제가 대치해 왔다는 점에서 독일은 우리와 같다. 다만 독일은 서로 전쟁을 치루어 민족분단까지 진행된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분단국가였다.

동서독관계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서독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앞질러 독일의 통일은 성큼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독일의 언론은 "독일사람이 통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통일이 독일사람들을 찾아온 것"이라고 표현했다.

* 濟州大 教授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현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도 대남-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적 정책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유엔정책과 서방외교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과연 변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빠르게 닥쳐 올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은 무엇이고 통일후 독일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북한변화를 진단하여 통일의 전망과 이를 위한 그 과제들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독일통일의 배경과 통일독일의 과제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연방국가의 형태로 통일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분단국가가 되었다. 전승국들이 연합국들이 독일을 분할한 배경에는 그동안 독일이 주변국가들에게 침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침략전쟁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1949년 동·서독으로의 분단국가가 수립되면서부터 1961년 베를린장벽의 구축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동서독이 각기 자신들이 독일에 대한 정통성과 단독대표권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다만 냉전체제가 전개되면서 서독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그리고 동독은 WTO(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서독은 EC(유럽공동체)에, 동독은 COMECON(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여 동·서독이 각기 다른 진영에 속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통일이 어렵게 되게 하였다.

이러한 냉전적 동서독관계는 1960년 후반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데탕트 추세에 힘입어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데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서독정부는, 69년에 먼저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의 전환을 하게 된다.

1. 브란트의 「民族分離의 克服」정책

동·서로 나누어 있어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베를린 시장을 오래 역임한 브란트 총리는 서부독일의 동독정책에 있어 새로운 기원을 시도하였다. 그의 대동독 정책은 우선 동서독의 분단구조는 일차원적이 아니고 다차원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분단이 단순히 국토만 둘로 나누어 진 것이 아니고 민족이 분리되고 이데올로기가 분열되고 정치권

력이 나누어 졌으며 경제와 복지에 있어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독일을 중심으로 NATO와 WTO의 핵무기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의 경제선을 철폐하고 국토를 통일하는 일은 유럽이 통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으로 나누어진 국토분단의 극복이 현단계에서 불가능하므로 분열된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분리된 양 체제의 극복은 어렵다고 그는 보았다.

가까운 장래에 평화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분단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분단상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베를린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체휼한 그로서는 동서독의 분단선을 그대로 둔 채 헤어진 가족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즉 분단의 경제선의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그 경제선의 질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동·서에 있는 민족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분리의 경제선에서 서로 만나볼 수 있는 경제선으로 그 질을 변화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그는 국토분단의 비극은 극복 못할 지라도 민족분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이 가시화되어 나타난 것이 72년 5월 양독간에 정신으로 조인 된 “동서독일반통행협정”이며, 동년 12월에는 동서독간의 화해와 공존을 다지는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기본조약에 의거 동서독은 73년에 UN에 동시가입하여 회원국에 되었고,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나라들의 교차승인을 받기도 했다. 브란트의 이러한 동독정책은 일부로부터 「분단고착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국토가 양분되어 분리되었던 민족에 상호방문의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재 상봉이 가능케 하였다. 국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분리된 민족의 재결합이라도 실현해 보자는 브란트의 <벽돌쌓기정책> 또는 <작은 걸음의 정책>이며, 이 정책이 장기간 추진될 때 분단의 벽을 허물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소위<접촉을 통한 변화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민족의 재결합은 먼저 동서독사이에 편지, 소포, 전화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개설부터 시작되어 상호여행 및 상호방문이라는 인적 교류로 이어졌다. 그 결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2백73만명 이상의 동독사람들이 서독을, 반대로 5백22만명 이상의 서독사람들이 동독을 방문하여 하나의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경제협력은 외국무역이 아닌 국내교역으로 했는데, 서독은 통상에 있어 특혜를 주고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선전과 생색을 떠나 실질적이고 조용한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서독은 경제협력을 함에 있어 동독사람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활발한 문화교류를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독일민족 공통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게 하여 민족적 일체감을 갖도록 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게 했다. 70년대 초부터 마스크

교류가 실시되어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서독에서 출간된 신문·잡지가 동독 어느 곳에서나 제한없이 반출·판매되었다. 일찍부터 서독의 재정부담으로 동서독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독일어대사전」이 편찬되어 국어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언어의 이질화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도 학술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회복의 한 예이기도 하다.

서독의 이러한 동독정책추진의 힘은 48년 이래 일관되게 뿌리를 내린 사회적 시장 경제제도에서 기인한다. 이 제도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역기능을 제어하여 자본주의의 해독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의 기본권보장, 기업내부의 노사공영제도확대, 주식의 소유집중화 방지 등의 정책이 그 예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은 동독민중들에게 서독사회는 적어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게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동독민중의 〈통일혁명〉

70년초부터 시작된 동서독간의 상호방문은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동서독간의 복지와 자유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양체제에 있어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서독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소련의 새로운 대동구정책이 1989년 발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구를 강점해 오던 소련이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가수인 후랑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My Way」를 상징해서 붙인 이 독트린은 동구 여러 나라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폴란드에서 맨먼저 비공산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다당제의 도입, 시장경제의 확립, 언론의 자유표방 등이 이루어졌다. 헝가리는 스탈린주의와 결별하면서 개혁을 가속화하여,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쳐져 있던 철조망을 절단하고 국경개방조치를 내린다.

이러자 많은 동독국민들이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러시를 이루면서 동독의 민주화시위가 가열되기 시작했다.

동독 제2의 도시인 라이프치히에서는 89년 9월 민중을 이끌 '신광장(Das Neue Forum)'이라는 재야단체가 결성되어 공산당 정권에 고개를 들고 결연히 민중적 항의데모를 시작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총선이었다.

그 결과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가 물러나고 크렌츠가 후임으로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미 동독체제에 회의론 가진 민중은 이에 만족치 않고 한걸음 더 나

아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으며, 공산당정권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 총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른다.

90년 3월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동독민중들은 서독의 콜 총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기민당(COU)을 주축으로 우파의 3당이 결속한 독일연합(AD)에 압승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동독민중들은 현실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으며 통일의 방법으로 동독공산체제를 포기하고 신속하게 서독체제로 흡수하는 길을 원했던 것이다.

서독으로의 여행과, 서독 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 동서독의 복지격차를 실감한 동독의 일반민중은 당장 서독의 동포들처럼 잘 살고 싶었으며 그러기에 통일을 미룰 수 없는 일로 삼은 것이다.

동독총선에서 기민당의 승리로 동서독관계는 더욱 가까워져 5월에는 「통화·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이 서명되었고 7월 1일에는 그동안 동서독을 나누어 왔던 분단의 경계선이 아주 없어지게 된다. 마침내 10월 3일 동독은 서독에 정치적으로 흡수되어 서독체제로의 합병형식의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독일의 통일은 <동독에서의 선거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동독의 민중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서독사람들은 관객의 입장에 있다가 동독인들로 부터 통일을 강요받은 셈이 되고 말았다.

3. 통일독일의 현실

대립된 두 체제를 내부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사민당은 서독이 아직 통일의 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고, 녹색당은 무작정 통일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5~10년간 별도의 정부를 가지고 국가연합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독의 일반 민중은 급속한 통일이 동서독 양측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를 가벼이 여긴채 즉각적인 통일로 내달았다. 마치 통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며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동독의 민중은 가지고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7개월이 지나고 있다. 게르만 민족의 지상과제였다고 볼 수 있는 통일이 실현되었는데도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통일의 감격은 구서독이나 구동독에 있어서나 찾아볼 수가 없다. 금년 초 통일된 독일을 방문한 최정호교수에 의하면 독일인들에게 통일의 감격은 순간이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되고 나서는 통일독일의 국민들은 모두다 행복치 않은, 민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 구동독지역의 〈통일후유증〉

통일만 되면 서독지역처럼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동독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통일후의 동독지역은 오히려 통일이전 보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1) 대량실업의 문제

소련이 중심이 되어 각 나라가 분업적 성격을 띤 공산권경제협력(COMECON)의 일원으로 역할 해온 동독경제는 노후화된 자본재시설, 낮은 생산력, 그리고 관리의 비효율성과 노동자의 근로의욕저하 등으로 인해 국제시장경제의 틀 속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구동독기업의 3분의 1은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아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76만명의 완전 실업자와 거의 일거리가 없는 86만명의 음성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에 덧붙여 실업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50만명의 노동자가 조기 정년퇴직을 당하고 있다. 그 결과 동독은 통일이후 세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실업자가 되어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91년 3월 25일자, 최정호, "통일독일 다시본다") 금년말이면 실업율은 5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완전고용이 보장된 사회주의체제에서만 지내 온 구 동독지역의 사람들에게 실업사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인 것이다. 그렇게 소망했던 통일이 구동독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실업이라는 시름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작년 7월 경제와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첫 4분기 동안에 동독의 대외수출은 전무하고, 치금(冶金)생산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식품품생산업자는 60%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공업생산은 50%로 줄어 동독의 GNP는 지난 한해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91년 3월 25일자)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폐쇄되지 않은 공장은 시설현대화가 시급하고, 낙후된 통신망,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 없이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동서독 경제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1:1의 화폐통합이 가져온 「가격상승충격」으로 오른집세와 물가고의 어려움 역시 동독인들이 통일 이후 겪는 일이다.

3) 파국적 환경오염

동독지역의 대기오염은 대단히 심각하다. 동독지역은 지난 70년초의 유가폭등과 에너지

과동시부터 전력생산을 유험함량이 높은 갈탄에만 의존했다. 그 이후 동독의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약 6백만의 유험산가스가 도시지역의 공기를 오염시켜 왔다. 그 결과 동독지역의 산림(山林)중 4분의 3이 죽어가고 있고, 주요 산업도시는 스모그현상이 심각하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 과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 땅속의 지하수도 마찬가지다. 또한 농지도 지나친 농약의 살포로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한 편이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 일등 공업국이라는 동독지역이 하늘의 공기에서부터 땅 위의 하천, 땅 속의 지하수 그리고 토지에 걸쳐 환경오염은 총체적이다.

나. 과중한 서독의 <통일비용>

서독체제로의 동독체제의 흡수통합은 통일연방정부로 하여금 구 동독지역이 안고 있는 <통일후유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동독의 800만 노동인구중 300만명에 이르는 실업대책, 과국속에 직면한 환경오염의 시급한 회복, 낙후되고 비능률적인 동독지역의 산업합리화와 현대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동독경제를 지원해야 할 통일비용은 엄청난 것이다. 89년 11월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당시 통일준비금은 약 1000억달러로 추정했으나 지금은 약 2700억달러~1조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결국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서독지역의 사람들의 반발은 큰 것이다.

이미 통일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됐다고 평가를 받아 온 마르크貨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대폭 하락하는 추세이고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서독의 무역수지가 금년들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는 3.5%선을 나타내고 있고,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서독지역의 사람들은 독일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통일이 되어 구 동독지역의 경제지원에 그 원인이 있었고 구 동독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21일은 라인란트 팔트주(집권 기민당 골츨리의 출신지역)의회선거에서 집권 기민당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사민당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Ⅲ. 북한의 최근 동향(주체사상의 재구성과 대외정책의 변화)

최근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온 남북한 단일의석 유엔 가입안을 철회하고 금년 가을에 유

엔 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 협정체결 의사가 있음을 공식통보했으며 필리핀 정부와 관계개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시작한 일본과의 수교교섭과 북경에서 계속되고 있는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접촉 등과 같이 북한 대외정책의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사정의 타개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계정세에 적극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와 90년에 이루어진 동독정권의 서독에의 흡수등의 사태에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변화 압력에 대해 '우리식대로 살자'는 전략을 내세워 대응해 온 것이다. 1989년 10월호 「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애폭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아갈데 대한 당의 혁명적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입장과 주체적 입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체사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축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 최고의 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김정일은 강변하고 있다. (김정일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 「근로자」 88년 1월호) 북한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재정의하여 보다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외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 틀을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일성의 90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우리식대로 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를 되받아치기에는 북한에 밀려드는 경제 및 외교적 도전이 너무 벅찬 것이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한국과의 수교로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현상을 확대시켰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사이의 제주도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도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 북한은 이에 적극 대응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소련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소련-북한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변화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소련은 금년부터 그동안 행해온 석유공급에 대해 상계 매입방식에서 현금결제 즉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태환성 경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환성 경화의 문제가 심각해 소련으로부터의 공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악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파트너로 59%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제국으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됐으며, 그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접촉을 확대하는 것도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80년이래 연평균 3%의 낮은 성장에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에다 김정일 승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킬 필요성을 절박하게 안고 있다. 이렇듯 북한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경험을 확대하는 개방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국제질서의 탈 냉전화와 동북아시아의 데탕트흐름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도전현상의 하나이다. 양극체제의 준일극화(emergence of a quasi-unipolar system), 경제력의 다극화,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쇠퇴경향 등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홀로서기'식의 대외 정책을 추진함은 1990년대의 로빈슨 크루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질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존 흐름에 영향을 가해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게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이 상징해주고 있는 탈냉전화는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아직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기본 방향은 상호 번영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임에 틀림없다. 현재 거론되는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과 경제공동체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새 질서의 형성이 이미 시작됐음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 89년대부터 주체사상의 질적 변화아래 선택적 개방화를 통해 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의 대변혁과 냉전체제의 종식은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외부에 힘에 의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북한의 지도층은 문제를 심각히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도층의 우려는 최근 북한의 대외-대남관계에서 전례없는 유연한 자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지도층은 그동안 지키고 발전시켜온 사회주의체제를 유지시켜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위기인식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제사회에 과감히 뛰어드는 대전환적인 외교를 추진케 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공산통일보다는 공존체제의 구축에 보다 주력하는 일이나 경제에서의 대외개방화(관광의 확대 및 경제특구의 신설)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체사상도 탈이데올로기화의 세계적 추세속에서 그 역할이 약해지는 것일까? 아직은 속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층이 추구하는 목표-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인민동원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그동안 수행해 온 정책결정에 주는 영향은 앞으로 현저히 감소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남-대외관계에서의 실용주의적 정책조정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의 변화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IV.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통일독일의 탄생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분단국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가 독일이 걸어 온 길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에 대한 분석을 우리의 통일문제 해결의 열쇠를 모색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동서독이 통일된 국가로 통합되기까지는 동·서독 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이 서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체제이기에 국가통합을 우선시한다면 통일로의 길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산가족재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여 동서독의 분단이 가져온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 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어 통합해 가는 「작은 걸음의 통합」을 누적시켜 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 독일의 통일에의 노력은 유럽에서 형성되어 가는 새 질서구축과의 조화를 이루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부 독일의 통일정책은 유럽에서 일고 있는 데탕트 물결과의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국제정치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되어

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이 통일되므로 유럽의 국제 질서속에서 불리한 지위로 밀려나갈 강대국이 생긴다면 그 강대국은 결코 독일의 통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독일의 통일노력은 강대국 간에 조성된 새질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전개되어 왔다.

셋째,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래 그렇게 열망해 오던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동서독의 사람들 사이에 통일의 후유증과 통일비용의 문제로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제가 통일이전 보다도 더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그 원인 서독지역 사람들이 지원을 안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독지역의 사람들이 서독사람들에 대해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서독의 사람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구동독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이 늘어나면서 통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된 후 동서독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심리적 통일후유증이 말끔히 가지지 않는 한 통일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자에 나타난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권의 대변력과 국제질서의 개편 그리고 경제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김일성은 누구 못지 않게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권력의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재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에서 어느 모델에 가까울까? 대체로 중국식의 개혁로선을 밟아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다져온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외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고 나아가 체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부분은 기존 로선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외교-대남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양하면서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독일의 현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민족통일을 위해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달될 것이라는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베트남식의 흡수통일 또는 서독에 의한 병합 통일 어느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토대로 두고 평화적이고 공존단체를 거치는, 즉 남북 양체제가 공존 공영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우리가 민족통일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원칙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안정속의 개혁이 바람직한지, 혹은 정치 개

력과 경제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소련의 초기 페레스트로이카 형태가 바람직한지, 혹은 루마니아식의 급진적인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지 우리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소련식이든 중국식이든 북한체제가 활력을 가지는 방향의 개혁,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공존이라는 단계를 거쳐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셋째, 통일문제와 상관하여 북한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기본원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부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대북정책을 이용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하는 데,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을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럴테면 북한의 민주화촉구 정책도 북한체제에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구사와 아울러 우리 체제 내부의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유효한 대북정책도 국민통합적인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국민관계에서의 정책문제로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모든 대북한 문제를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핫이슈화 시켜서는 곤란하다. 여기에는 다분히 국내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모든 대국민 홍보차원의 정책을 클리슈화시켜 국민이 이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상우,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통일문제연구」 제8호, 1990.
2. 한승주,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통일의 좌표", 이호재편「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법문사, 1989.
3. 최상용,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1.
4. 정용길의,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사, 1991. 봄호.
5. 최정호, "통일독일 다시 본다" ①~⑩「동아일보」 1991. 2. 25~5. 4
6. 장행훈, "통일독일, 「정치적 환성의 대가」", 「신동아」, 1991. 7호.
7. 고병철, "동북아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상: 국제정치학적 고찰", 제주국제협의회 창립 기념학술세미나(1991.6.21~22) 발표요지.
8. 유석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자문회의 창설 10주년 기념학술세미나(91.6.3) 발표요지.
9. 고성준의,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월간전망」, 1991. 6호.
1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북한중앙방송담화 (91.5.27), 「통일속보」 국토통일원, 91-17호.
11. 김정일,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근로자」, 1988년 1호.
12. 고태천,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1989년 10월호.